

2024. 3. 21. (목) 10:00
제30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〈 안건명 〉

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
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도시교통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6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「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21조에 따라 2024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

2. 제안이유

법률에 따른 수탁 대상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업무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, 조사 결과를 보호구역 관리에 반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위탁사무 내용

- 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
- 보호구역 안전시설 및 현황조사,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,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등

○ 위탁시설 개요 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

- 관내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118개소

구분	합계	어린이보호구역	노인보호구역	장애인보호구역
개소수[개]	118	108	8	2
총연장[m]	60,925	59,085	1,610	230
평균연장[m/개]	516	547	201	115

○ 민간위탁 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2024. 12. 31.까지

○ 수탁기관 선정방식

- 수탁기관 : 한국도로교통공단 (경찰청 산하 공공기관)
- 수탁방법 :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

* 관련법률에 지정된 전문기관으로, 수탁기관 선정 심의 생략
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수탁기관의 선정)
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 제외

○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- 소요비용 : 약 310백만원 ('24년 1회 추경 예산 수립 예정)
 - * 도비 보조금(50%) 신청 중, 향후 교부결과에 따라 시비 매칭
- 산출근거 : 총연장 61km × 5백만원/1km = 약 310백만원
 - * 한국도로교통공단 원가산출 내역서 기준

○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직접조사 또는 일반 용역계약을 통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현장조사, 도면 작성 및 개선안 수립 등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담당 공무원의 직접 수행은 어렵고, ○ 법령 개정에 따라 최초 시행되는 사항으로 관련 지침을 수립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초기 시행착오 예방 필요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수행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
경제적 효율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탁비용은 관련지침에 따른 과업범위에 적합하게 수립된 표준원가계산에 근거하고, ○ 안정적인 결과물 도출로 보완 기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 증가 기대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도로교통법」을 관할하는 경찰청 산하기관으로서 교통안전분야에 축적된 경험 및 관련 전문인력 활용 가능
성과 측정의 용이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공신력 있는 성과 측정 가능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지도·점검)에 따라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, 감독이 가능하고, ○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경찰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과업수행의 투명성 확보 기대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4년부터 최초 시행되는 조사로 일반용역사나 타 전문기관의 수행 경험이 전무함에 따라 관련 지침을 수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결과 도출 도모
종 합 의 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법령 개정에 따라 최초 시행되는 사항으로 일반용역사나 타 기관의 수행 경험이 전무함에 따라 관련지침을 수립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공신력 있고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

4. 참고사항

○ 추진근거

-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의4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)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)
- 「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의회동의 및 보고)
- 「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업무제휴·협약의 체결방법)

○ 향후 계획

- 2024. 4. :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 (시, 한국도로교통공단)

5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2024. 1. 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,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의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임
-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의 4 제①항 “시장은 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,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의 교통환경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지정 및 해제, 관리에 반영” 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동 법 제12조의4 제③항에 의거 본 실태조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
-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관심도와 사업의 중요도가 나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며, 관련 법령 신설에 따라 최초로

시행되는 사항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공신력 있는 교통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위탁은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.

제12조의4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) ①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,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·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.

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도로교통공단법」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(이하 “한국도로교통공단”이라 한다) 또는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24. 1. 30.>

도로교통법 시행령

제8조의2(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)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(이하 “어린이보호구역”이라 한다) 및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(이하 “노인·장애인보호구역”이라 한다)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1.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(이하 “도로교통공단”이라 한다)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교통 관련 기관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교통 관련 기관

4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중 교통 관련 기관

5. 정관이나 규약 등에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
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.

**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
실태조사 위·수탁 협약**

남 양 주 시
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

남양주시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위수탁 협약 (안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의 목적은 남양주시장(이하 “위탁자”라 함)이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(이하 “수탁자”라 함)에게 위탁하는 『남양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』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위탁업무 범위 및 재 위탁) ① 이 협약에 의한 세부업무 내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고, 세부 업무추진절차는 “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” 및 설계서상의 “과업내용서”에 따른다.

1. 교통사고 현황분석
2. 보호구역 시설·통행량 조사 및 문제진단
3.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작성
4.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
5. 기타 분석 및 보고 등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

② “수탁자”는 제1항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업무의 범위 중 필요한 분야(교통량조사 등)를 “위탁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 재 위탁할 수 있다.

제3조(위탁기간 및 금액) ① 본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계약 후 착수일 ~ ‘24.12.31로 한다. 다만, “수탁자”의 해산 또는 사업포기 등의 사유 미 발생 시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의 협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.

② 위탁금액은 “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”의 ‘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항목별 소요인력’을 기초로 계산된 금 310,00,000원(금 삼억일천만원)으로 한다.

제4조(위탁소요경비 지급 및 사용) ① “위탁자”는 “수탁자”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협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수행기간 동안의 소요경비에 대하여 “수탁자”가 안내하는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에 따라 “수탁자”에게

지급한다. 다만 “위탁자”는 예산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소요 경비의 지급시기, 금액 등을 “수탁자”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

- ② “수탁자”는 지급받은 소요경비를 협약된 업무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.

제5조(실태조사 결과 보고) ① “수탁자”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 결과를 ‘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’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, 이 외에 “위탁자”가 실태조사 수행과 관련한 별도의 업무수행 보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② “수탁자”는 매년 사업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연간 실태조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“위탁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의 변경) “위탁자”는 위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“수탁자”의 요청이 있거나, 그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“수탁자”와 협의를 거쳐 소요경비 및 업무수행기간 등의 협약사항 또는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 등) “수탁자”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“위탁자”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실태조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, 위법·부당하게 처리한 때
2. 명백한 책임으로 인하여 협약을 위반한 때
3. 관계법령 및 위탁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등을 고의로 위반한 때

- ②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이 협약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 “위탁자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신의성실 의무)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는 신의를 가지고 이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,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보안조치) “수탁자”는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보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0조(기밀준수 의무) “수탁자”는 업무수행 중 알게 된 “위탁자”의 주요업무 사항을 “위탁자”의 허락없이 제3자나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되며, “수탁자”의 업무담당자 이외에 소속직원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제11조(손해배상) ① “수탁자”는 “수탁자”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실태조사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“위탁자”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협약의 해지로 “수탁자”에게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“위탁자”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배상금액은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협의하여 정한다.

④ “수탁자”는 실태조사 업무를 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“수탁자”의 부담으로 배상한다.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“위탁자”의 책임으로 인한 경우에는 “위탁자”가 배상한다.

제12조(민·형사상의 책임 등) ① “수탁자”는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

② “수탁자”는 고의 및 중과실로 보호구역 내 재산을 훼손하거나 망실한 때에는 “위탁자”에게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“위탁자”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거나 배상하였을 경우 “수탁자”는 그에 대해 고의 및 중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3조(관할법원) 이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“위탁자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4조(권리·의무의 양도 제한)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사전 동의 없이 이 협약에 의한 권리·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5조(재산권) ① 실태조사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은 “위탁자”에게 귀속된다.

②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의 승인을 얻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다. 이 경우 “위탁자”의 업무 위탁계획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.

제16조(관계자료의 제출 등) “수탁자”는 “위탁자”로부터 업무추진현황, 관계서류의 열람, 관계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제17조(관계법규의 준수 등) ① “수탁자”는 이 협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·관리함에 있어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”, “지방재정법”, “지방회계법”, “지방자치법”등의 법령에 따른다.

제18조(협약의 해석) 이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판례 및 회계관계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“위탁자”가 결정한다.

2024년 4월 일

위탁자 :	남양주시장	주 광 덕 ㉠
	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(금곡동)	
수탁자 :	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지역본부장	권 기 환 ㉠
	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3로 41	